

# 우리 건축계에도 첨단정치가 필요하다!

What we need in the Architecture Profession is HI-POLITICS!

金鎮愛/도시건축 PD. 서울포럼대표

Designed by Kim, Jin-Ai

## 정치, 좋은 정치, 첨단정치

도대체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사회생활이란 없다. 우리나라 특유의 덕목으로 치는 정치적 순수성이란 기실 순진함 내지는 위장에 불과하다.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순수성(또는 명분) 밑에는 어김없이 필연적으로 실리성이 내재해 있기 마련이다. 명분이 강조되면 실리는 숨어버리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어질 수는 없다. 실리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분이란 물론 '실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하지만 실존이란 역시 생존보다 실제적 어필이 약하다. 그래서 순수함이 도덕적 덕목으로 요구되는 우리사회에서 실리찾기란 쉽게도 제2의 시장(市場)을 형성하게 되는 모양이다.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란 명분과 실리의 고리를 맺어주는 기술이다. '좋은' 정치란 명분세우기도 살리고 실리찾기도 살리는 묘기이다. '첨단정치'란 무엇일까? 혼탁한 정치와 순진한 정치로 물들여진 사회를 기묘묘하게 뛰어넘게 하는 도(道)라 하면 어떨까?

신한국(新韓國) 창조라는 결코 쉽지않은 이상을 이루려면 정치가 있어야 하고 좋은 정치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있어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난마와도 같이 얼킨 사회를 풀어 헤쳐나가는 첨단정치가 있어야 한다. 순수함과 혼탁함이 미로와도 같이 얼켜있는 세태를 극복하는데 있어 어찌 신기에 가까운 도가 필요하지 않으랴.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치열한 생존게임이 벌어지는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필연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 변화하는 건축상황

그러면 우리 건축계는 어떠한가? 나라가 변하는 만큼 그 한부분을 점하는 건축산업 역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과연 어떠한 변화일까? 그리고 그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만큼 우리 건축계는 쇠신할 태세가 되어 있는가?

건축산업의 상황변화는 타산업의 상황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경쟁'이란 것이 무서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당장 상품을 팔아야 하는 타산업에 비해 피부에 와 닿는 급박감은 덜하지만 건축을 포함한 서비스산업계의 시장개방, 이에 따른 전면경쟁상황은 수년내에 진한 강도로 전개될 것임에 틀림없다.

은 나라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냉혹한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뚜렷한 지향목표를 내걸고 있는 반면 앞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암중모색에 있다 하면, 우리 건축계는 어떨까? 우루과이 라운드가 쟁점으로 제기된 이년여전과 국제시장개방의 진행수순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이나 우리 건축계는 얼마만큼이나 앞으로 가고 있을 보다 복합적이고 시장도 다양한 산업계에서 어찌 그 내부에 여러 이익집단이 세분되지 않을 수 있으랴. 다만 문제삼을 것은 그러한 갈등이 얼마나 생산적이나 하는 것일 것이다. 소송적이거나 소비적인 갈등이 아니라 대승적이고 생산적인 갈등이 된다는 내분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음에...

문제소지는 여러 곳에 있다. 도대체 건축실무의 질을 결정하는 건축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은 놔두고 하필이면 왜 건축사법 개정과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목적이 결부되어야 하는지도 의아한 일이다. 건축사무소의 규모와 형태, 운영방식이 경쟁력 제고에 전혀 영향변수가 안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이 민간운영의 형태를 규정하고자 함은 아직도 전시대의 공급관리적 발상이며, 실타래처럼 엉킨 건축관련 법의 험한 내용에 대한 개선은 비켜둔 채 손쉬운 타깃을 겨냥하는 안일함이며, 엄정한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자생적 경쟁력을 키워야 진정한 경쟁력이 배양될 수 있다는 원칙에 배치되는 단기적 대응방식이다.

건축계 내의 여러 이익집단들, 공공의 개입에 의한 제도변화에 명확한 이익을 예견하는 집단, 명확히 불이익을 예견하는 집단, 불확실성 속에 유보와 방관을 고수하는 집단이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소구점을 찾는 것이냐 일 것이다.

## 소구점을 찾는 첨단정치

그래서 우리 건축계는 첨단정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명분을 살리고 실리를 찾으려면서 소비적 갈등을 지양하고 현실적 제약을 헤쳐나가는 슬기로운 첨단정치가...

명분은 분명하다.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이. 여기에 건축영역의 효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 건축행정의 합리화를 통한 공히 공공, 민간 공유의 경제성 확보, 또한 건축기술혁신촉진을 통한 자율적 경쟁력 배양이 보태어 진다면 대의명분은 보다 실천적인 지향목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리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건축계내 각 이익집단의 기득권 유지, 또는 기득권 선점욕구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

시대가 변하고 시장이 넓어진 만큼 정치의식도 변하는 협회, 소송적 이익집단의 취합단체가 아니라 대승적 이익집단으로서 적극적으로 비전을 만들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협회, 공공부문에 대해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협회로서의 첨단상이 필요하다. 변화란 안정을 위협하지만 그 대응여하에 따라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하는 도전이기도 하다. 이 도전을 우리 건축계 모두 의식하고 있는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하는 냉정한 국제시장, 첨단정치란 이러한 도전의 실체를 파악하고 건축계의 내적단합을 촉발하는 기회로 삼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

순진무구한 발상이며, 이익집단의 개별적 실리 확보 욕구는 전제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단기적인 실리 확보 차원을 뛰어넘어 집합체로서의 건축계의 대국적인 실리 확보 차원으로 분쟁을 승화시킬 수 있다면 명분에 합당한 실리 찾기가 될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속에서 건축계의 첨단정치란 명분에 대한 실천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실리에 대한 현실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소구점이란 다양한 명분과 다양한 실리를 각기 만족시키려 하는 절충적인 취합에서 찾아질 수 없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의 소구점이란 상황변화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발상의 대전환 필요성을 각기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비로소 찾아질 수 있다.

건축계의 첨단정치란 건축계의 내부적 갈등시각을 해방시켜 대사회적 시각으로 전환시키는 일, 국내시장의 분할선점 시각을 지양하고 국제시장의 확대시각으로 전환하는 데에 그 역할이 있다. 말하자면, 건축계 내부의 갈등을 극복할 만한 공동의 적(敵)을 만들어 화합의 소구점을 찾는다고 할까?

### 국제경쟁력의 실체란 ?

그 공동의 적, 또는 생존과 발전을 위한 공통쟁점은 역시 '국제경쟁력'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경쟁력이란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시장 견제나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이권적 해석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건축산업이 엄정한 객관화단계로 도입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오직 우위만이 이기는 냉혹한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가 더이상 존재치 않고 균형적 배분도 작용하지 않는 첨단시장으로의 도입이 그것이다. 철두철미한 경제는 리(利)가 지배하는, 기술력과 자본력이 지배하는 무서운 시장.

이러한 객관화된 시장, 경제논리가 철저하고 기술력과 자본력이 우위를 결정하는 첨단 시장경쟁이기에 더욱 첨단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첨단시장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려면 외교, 홍보, 네트워크, 마케팅, 정보처리 등 첨단정치 감각이 가미된 고도의 기술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건축계, 건축정책부서 그리고 국가산업경제 정책부서는 건축산업의 고부가가치적 발전잠재력, 건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천적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역시 총력전을 시사한다. 건축계 일각의 대표주자 보호육성이 아니라 건축산업 특유의 복합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이해한 바탕위에 전개되는 '건축계' 육성, 건축사무소의 형식개선이 아니라 기존 건축실무관련법과 제도에서 건축기술혁신을 제약하는 공급관리적 요소를 과감하게 수요관리적 제도로 바꾸어 나가면서 그릇갖추기가 아닌 내용갖추기를 추진하는 일, 건축기술혁신을 위해 공공부문이 공공으로서 주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 등...

또한 국제경쟁력의 실체가 계량적 기술우위만이 아니라 정치적 감각이 연계될 때 기술우위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의식도 필요하며, 어차피 개방될 국제시장에서 국내건축계의 맹목적인 보호가 아니라 세련된 방식의 보호가 홍보전략에 대한 건축산업이란 근본적으로 종합, 복합적인 성격이어서 더구나 첨단시장에서는 엔지니어링 설계기술력뿐 아니라 디자인 기술력도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가진다는 사실, 이들의 조인트 활동이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국제시장을 예의 주목하여 국제적 건축네트워킹과 국제건축인사를 의도적으로 키우는 공공지원도 필요하며, 국제시장의 마케팅이란 결코 한 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전략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각도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부원은 모조록 하나의 돌로 여러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첨단시장의 생리를 전제한 첨단정치를 전개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시공기술력, 엔지니어링 기술력, 디자인 기술력, 프로그램 기획력, 마케팅 전략 구사능력이 상호연계되며 발전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필요하며, 여기에 더하여 필요사안에 따라 국가적인 자본지원, 외교, 홍보를 유효적절하게 선택적으로 구사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협회는 공히 이익집단으로서 건축계의 명분과 실리의 고리를 이어주면서, 협회내부집단의 갈등요소를 숙지하고 명분을 구체화하는 민간첨단정치의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시장이 넓어진 만큼 정치의식도 변하는 협회, 소송적 이익집단의 취합단체가 아니라 대승적 이익집단으로서 적극적으로 비전을 만들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협회, 공공부문에 대해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협회로서의 첨단상이 필요하다.

변화란 안정을 위협하지만 그 대응여하에 따라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하는 도전이기도 하다. 이 도전을 우리 건축계 모두 의식하고 있는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하는 냉정한 국제시장, 첨단정치란 이러한 도전의 실체를 파악하고 건축계의 내적단합을 촉발하는 기회로 삼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